

3월 17일 이라크 침략 4년 반전 행동에 동참하자



이라크 점령이 4년을 맞이한다. 그 동안 부시의 전쟁은 이라크는 물론 미국 국내와 세계 곳곳에서 커다란 저항에 직면했고 그만큼 타격을 입었다.

전쟁이 촉발한 정치 위기는 전쟁을 지지한 부시의 동맹들도 뒤흔들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안이 상원에서 부결되자 총리가 사퇴했다. 파병 연장안 부결 직전인 2월 17일에는 비첸사에서 10만 명이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

를 벌였다.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도 이라크 주둔 영국군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물론 이라크에서 돌아온 병력의 일부를 아프가니스탄에 재배치할 것 같다. 그러나 그 시기가 공교롭다. 알궂게도 “부시의 푸들”은 부시가 온갖 비판을 무릅쓰고 미군 증파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감군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반전 운동이 갈 길은 아직 멀다. ‘테러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데다, 부시와 네오콘들

이 또 다른 야만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 쌓은 성과를 딛고, 새롭게 제기되는 도전에 맞서야 한다.

먼저, 지금 부시는 사활적인 전선인 이라크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와 올해 1월 27일 워싱턴 50만 반전 시위에도 불구하고 2만 1천5백 명 규모(사실상 그 두 배 규모가 될 듯하다)의 증파를 강행하고 있다.

미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냉전 이후, 경제적으로 다국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자신의 군사력을 적극 활용해 잠재적 경쟁 강대국들에 맞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려는 것이다.

‘증파’

그러나 그들의 전략은 목표 달성은커녕 이라크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상황은 특히 중동 지역에서 모순적인 결과를 빚었다.

첫째, 미군이 이라크에서 처한 곤경은 중동 전역의 저항 운동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지난해 팔

레스타인에서는 반제국주의 저항 운동 단체인 하마스가 선거에서 승리했고,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레바논 대중의 지지에 힘입어 이스라엘의 침략을 물리쳤다.

둘째,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 전역에서 이란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 이라크 전쟁의 최대 승자로 이란을 꼽았다.”(<프레스리언> 2월 22일치)

원래 이란은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 이라크에서는 무크타다 알 사드르가 이끄는 마흐디 군 같은 친(親)이란 성향의 저항 조직이 세를 키웠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헤즈볼라도 지난 여름 전쟁의 승리로 중동 전역에서 명성을 얻었다.

셋째, 부시의 이라크 수렁과 이란의 위상 강화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미국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포린 폴리시>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중동에서 급격하게 영향력을 늘린 중국”을 이라크 전쟁의 다섯번째 수혜자로 꼽았다.

》7면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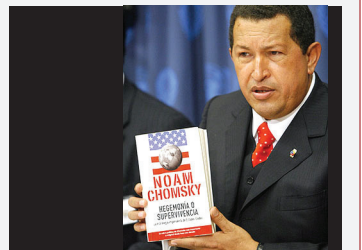
중동의 위기와 3·17 반전행동

-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하는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정치
- 영국 런던 10만 반전 시위
- 이란 전쟁을 위한
미국의 거짓말

6~7면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에 맞서

5면



노무현을 차베스에 비길 수 있는가

4면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의 삼성 폭로 도서출판

2면

존 몰리뉴 킬럼 -맑스주의와 종교

9면

우리은행 ‘모델’ - 사기극으로 드러나다

2면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의 정치 오류

8면

<맞불> 온라인 기사

중국 제국주의와 아프리카
아프리카 민중을 수탈하는 중국
제국주의의 행태와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의 갈등, 아프리카 민중 저항의
동향을 살펴본다.

인도의 ‘경제 성장’과 불평등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ww.counterfire.or.kr

3.17

이라크 침공 4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시간: 3월 17일 오후 3시
장소: 서울역 광장(집회 후 광화문으로 행진)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인용해도 될까요?

“웬만한 것은 웃음으로 답을 대신하겠
다.”

—이명박, 각종 추악한 의혹들을
얼버무리며

“한나라당과 노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대연정을 하고 있다. … 유일하게 한나라
당 ‘결재’ 없이 한 일이 사학법 개정”
—임종인 의원

유시민: “분당 사태로 집권 가능성이10
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떨어졌다.”
최재천: “1퍼센트로 떨어진 게 아니라 0
퍼센트였던 것을 1퍼센트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열우당의 어두운 미래

“다양한 정책들을 신자유주의라는 잣대
로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찬성과 반대 이
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
면은 받아들이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
[하제]”
—천정배의 기회주의

“도로 민주당이라는 향간의 비아냥과 비
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열우당 문화상

“우리는 부시에게 배신당한 기둥이다. …
살아남는 길은 우리도 핵에 대응하는 길을
찾는 것뿐 …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2·13 합의에 배신감을 토로하는
〈조선일보〉 김대중

분리직군제 ‘실험’은 벌써 실패했다

최근 〈프레시안〉이 다룬 ‘우리은행 모델’
연속 기사의 결론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의] ‘결승선’이 아니라 마라톤의 ‘출발선’”
에 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도입한 분리직군제는
이미 ‘노동자 차별 마라톤에서 우수한 성적
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제도’다. 특히, 금융
산업에서는 출발선에 선 실험적 제도가 아
니라 노동자들에게는 그 악랄함이, 사용자
들에게는 그 효용성이 입증된 차별 합리화
제도다.

그래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은 최근
분리직군제의 차별 실태와 반대 근거를 제
시한 자료집까지 내며 우리은행 사례를 반
박하고 나섰다.

대한생명에서는 정상 승진시 근속년수
28년에 해당하는 별도 사무직군의 노동자
연봉이 종합 직군의 신입사원 연봉보다 낮
다.

우리은행 직군제에서는 여성 계약직이
25년을 근속하고 과장 직급에 해당하는 마
스터까지 승진한다 해도, 동년배 정규직 남
성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졸 신입사원 남성 정규직 임금의 90퍼센
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겨레21〉 648호도 직무급제는 자의적
인 직무 가치평가 기준 때문에 오히려 “정
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면서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분리직군제는 주로 여성 노동자 차별에
악용되고 있다.

하나은행에는 FM/CL직군이라는 ‘정규
직’ 분리직군제가 이미 있는데, 사무지원 업
무만 담당하는 이 직원들은 입사 동기인 직
원들과의 임금 격차가 3대 2 수준에서 계속
확대됐다.

그래서 2004년부터 노동조합은 직군제

지난 2월 성차별적 직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하나증권 노동자들

폐지 투쟁을 벌이고 있고, 노동부도 남녀고
용평등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차별

최근, 분리직군제 폐지를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벌인 하나증권도 차별적인 사무직
군 소속 직원이 모두 여성 노동자다.

이처럼, 분리직군제가 존재하는 기업들
에서 노동자들의 공통된 요구는 ‘차별적 분
리직군제 폐지’다.

김금숙 사무금융연맹 여성국장은 “과거
여성 노동자들이 싸워서 폐지시킨 여행원
제도를 이제 다시 [분리직군제로] 도입하는
것이 해법인 양 말하는 것은 전선을 무너뜨
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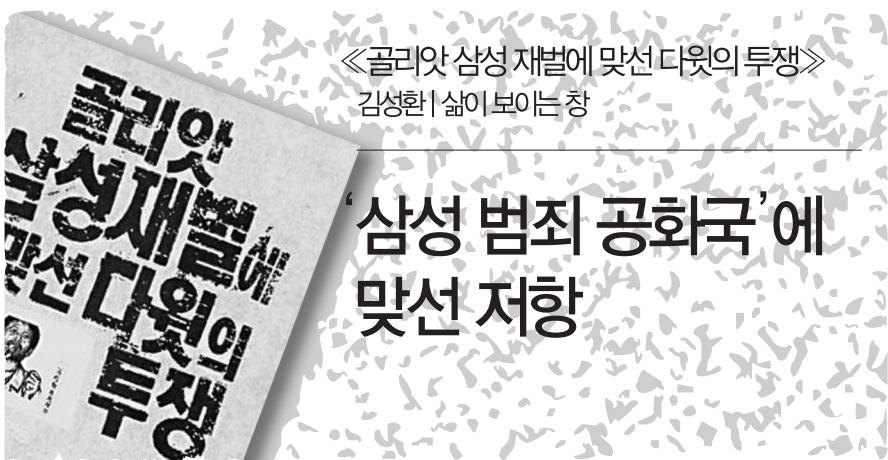
폐해가 이미 검증된 제도를 노동운동 일

부와 진보 언론들이 단계별 차별 시정 전략
으로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하나
은행 차별 직군제 폐지를 요구했으나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금융노조가 우
리은행 사례를 ‘출발선’으로 보는 것은 자
가당착이다.

오히려, 씨티은행에 맞서 18일간 파업을
벌인 끝에 하나은행과 비슷한 분리직군제
를 철폐한 한미은행지부의 사례가 확산돼
야 할 모범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
보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요구하는 정규
직·비정규직 단결 투쟁이 필요하다.

김문성

* 우리은행 모델(분리직군제)에 대한 더 많은 기
사를 보려면 〈맞물〉 26호와 32호의 관련 기사를
보시오.



《골리앗 삼성 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
김성환 | 삶이보이는 창

‘삼성 범죄 공화국’에 맞선 저항

지난 10년 동안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맞
서 싸웠고,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김성
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최근 책을 펴냈
다. 《골리앗 삼성 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
쟁》(삶이보이는창)은 말 그대로 ‘골리앗
삼성’의 횡포를 폭로하는 한편, 이에 맞선
저항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 ‘무노조 경영’ 역사는 그야말로 끔
찍하다.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중공업, 삼성
SDI 수원공장과 부산공장, 삼성에스원, 삼
성캐피탈, 아르네삼성, 신라호텔, 삼성플라
자, 수원 삼성전자, 삼성전자 애니스, 신세
계 이마트 등등 삼성 계열사들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노력이 야만적인 납
치·미행·감금·폭행 등으로 어떻게 무

너졌는지를 통렬하게 고발한다.

삼성은 ‘실력 저지’가 쉽지 않으면 복수
노조 금지 원칙을 악용하기도 했다. 삼성중
공업은 10분, 호텔신라는 40분, 에스원은
20분 먼저 사측이 유령노조 설립 신고 서
류를 냈다.

아르네삼성의 경우, 사측의 온갖 방해와
노조 설립 신고 서류 탈취 시도에도 불구하
고 대다수 노동자의 지지 속에 노조가 세워
졌다. 그러자 삼성은 아르네삼성 주변에 철
제 담장을 쳐 다른 공장 지역과 분리시키
고, 심지어 아르네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
들과 함께 섞이지 않도록 구내식당과 통근
버스 사용조차 금지했다.

이 책에는 이런 극악한 노무 관리의 절정

을 보여 주는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시나
리오 및 대응 방안” 보고서도 실려 있다. 이
보고서에는 노사협의회를 회유하기 위한
“마음 관리”(회식과 단합대회), 관공서 업
무 담당자 “내 사람화”(로비) 계획, 노동자
항의 행동시 상황별 대응 방법, “인간적인”
설득 요령, 노사 협상 결렬시 설득 논리 등
의 경악할 만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삼성은 김성환 위원장이 이 보고서를 포
함해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모아 자료집을
냈다는 이유로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 훼손’ 혐의
로 고소해 투옥시켰다.

X파일

그러나 정작 끊임없이 부정과 비리를 저
지르고 ‘X파일’ 사건으로 온 나라를 뒤흔
든 삼성의 소유자들과 경영자들은 지금 온
갖 부귀영화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

‘X파일’로 불거진 2002년 대선 자금 수
사는 “관계자들이 모두 해외로 출국해버렸
기 때문”에 종결됐다. 1997년 대선 때 이
회창 동생 이회성이 삼성한테 60억 원을
받은 것이 밝혀졌는데도, 2002년 대선 때
삼성한테 30억 원을 받은 노무현이 직접
나서 “수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마해
호지부지됐다.

삼성 부회장 이학수는 ‘X파일’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
지만 1년도 안 돼 사면 복권됐다. 반면, 국
제사면위원회가 양심수로 선정한 김성환
위원장은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귀휴(휴가) 요청조차 거부당했다!

그러나 마치 무소불위처럼 보이는 삼성
의 이런 권력에 맞선 투쟁들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2005년 삼성 회장 이근희는 4
백억 원 기부 대가로 고려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려 왔다가 학생 시위에 부딪혀
큰 망신을 당했다. 학교 당국은 필자를 포
함해 이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출교시켰
지만, 출교 학생들은 아직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다.

최근 〈시사저널〉 기자들의 파업은 주요
14개 언론사 광고 수입의 10퍼센트를 차지
하는 삼성의 언론 통제가 결코 완전하지 않
음을 보여 줬다.

김성환 위원장의 옥중 서신과 법정 진술
문을 읽다 보면, 삼성과 국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싸워온 한 투사의 결연
한 의지가 가슴을 울린다. 한국 사회에서
삼성의 오만함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릎
꿇을 때까지 우리 ‘다윗’들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범진

(이건희 철학박사수여식 항의자, 고려대 출교자)

‘진보 논쟁’ – 쟁점은 무엇인가?

[편집자] 32호에 이어 ‘진보 논쟁’ 관련 기사를 다시 싣는다. 지난 호 기사가 진보진영에 대한 노무현의 주제넘은 훈수를 반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호에서는 ‘진보 논쟁’ 전체를 아울러 평가한다.

이른바 ‘진보 논쟁’이 뜨겁다. 최장집·조희연·손호철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쟁에 노무현이 가세하자 사회 전체의 의제로 떠오른 느낌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 21일, ‘민주노동당집권전략위원회’가 주최한 ‘위기의 진보진영, 대반전 가능한가’ 토론회(이하 ‘대반전 토론회’)는 매우 열띠게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를 포함해 최근의 ‘진보 논쟁’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몇 가지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대선을 맞아 진보진영이 단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제법 광범하다는 점이다.

최근 <진보정치>의 조사 결과가 보여 주듯이, 민주노동당 안에서도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한 지지는 매우 크다(66.7퍼센트). ‘대반전 토론회’에서도 손석춘 새사연 원장과 지금중 미래구상 사무총장이 ‘진보대연합’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상현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과 손호철 교수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둘째는 노무현 정부 4년간 심화한 사회양극화 때문에 반신자유주의 의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됐다는 점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때와 비교해 봐도 이 점은 도드라진다.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 5년간 추진된 가혹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NGO들까지 아우르는 광범한 연합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반신자유주의 의제는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되고 있다.

셋째,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차베스 개혁’이 한국 진보진영 사이에서 대안 모델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희연 교수는 ‘차베스 개혁’을 “진보적 민주주의”라 칭하며 진보진영이 “제도 정치로 수렴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 대중 자체를 급진화”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석춘 원장과 지금중 사무총장도 ‘차베스 개혁’이 한국 사회에 유효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노무현 정부를 경험하며 대중의 의식과 운동이 급진화했음을 알 수 있다.

차베스

그룹에도 진보진영의 대선 전략과 향후 과제를 둘러싼 논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노무현 정부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요인을 “포위된 개혁”에서 찾았다. 보수층의 반발과 진보 세력의 외면이 노무현 정부 실패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비판적인 조희

연 교수도 “[노무현 정부에서 심화한 양극화는] 이전 체제에서 물려받은 것도 있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세계 체제적 조건의 제약도 있다. … 일정 부분 진보 일반의 한계도 있다”고 제약 조건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개혁 실패에는 ‘선택’이라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열우당에 몸담았던 임종인 의원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함께 장악한 좋은 조건에서도 … 기득권 세력에 맞선 강력한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른바 ‘4대 개혁’ 입법과 부동산 정책에서는 우익의 반발에 쉽게 타협했고, 팽택미군기지 이전이나 이라크·레바논 파병 등 친제국주의 정책은 앞장서 추진했다. 비정규직 개악·노사관계로드맵·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은 “가히 혁명적”(최장집)이었다. 그나마 유일한 성과라고 자랑하는 사학법 개정조차 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개악을 약속하고 있다.

요컨대, 한나라당과 “사실상 내용적 대연정”(임종인)을 하며, “민주 개혁엔 무능하고 신자유주의 개혁엔 유능”(손호철)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 실패의 핵심 요인이었던 셈이다.

둘째, ‘진보대연합’의 범위이다. 손호철 교수는 ‘민주-반민주’ 구도는 해체됐고 ‘반신자유주의’가 핵심 전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희연 교수는 반신자유주의가 중요하지만 “반수구” 전선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부르주아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는 일부 운동 세력의 잘못된 전략에 반대하는 손호철 교수의 문제의식은 옳다. 그러나 전술 면에서는 반수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때가 드물지만 엄연히 존재한다. 가령 2004년 봄 우익의 노무현 탄핵 사태가 그런 경우였다. 한국

사회는 이른바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불안정한 사회다. 국가보안법이 온존하고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자유조차 억압받고 있다. 한나라당과 우익들은 기본적 민주 개혁조차 가로막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반민주 구도가 해체됐다는 손호철 교수의 주장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환원하고 있다는 점을 제쳐놓더라도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희연 교수는 열우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에 반대한다면서도 “중도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합’을 언급하는데, 이 때 연합의 범위와 방식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테러와의 전쟁’

한편, 손석춘 원장은 “반신자유주의, 6·15 공동선언”을, 지금중 사무총장은 “반신자유주의, 남북평화, 민주주의 심화·발전”을, 정대화 교수는 “자본주의 비판, 직접민주주의 실현, 분단체제 극복” 등을 ‘진보대연합’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이 입장들도 진보진영의 단결을 염원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열우당 개혁파의 후신 정당에 대한 태도가 분명치 않다. 한국의 진보는 노무현 정부·열우당 후신 정당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이 모호하면 이른바 ‘신판 비판적 지지’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열우당 개혁파 후신 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계급 연합 전술은 우익에 맞선 투쟁을 강화하기는커녕 약화시킨다. 김대중 정부 5년과 노무현 정부 4년이 이 점을 생생히 보여 줬다. 부르주아 포퓰리스트 세력에게서 정치적·조직적 독립을 유지하며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진영이 우익에 맞서 가장 효과적으로 투쟁하는 길이다.

그런데 임종인 의원을 제외하면 ‘진보

‘반신자유주의’ 의제는 진보진영 단결의 핵심 고리가 되고 있다

논쟁’을 벌이는 논자들 모두 반전 의제를 간과하거나 단지 한반도 중심으로 협소하게 제기하는 것은 아쉽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상시적 전쟁의 시대에 반전 의제는 정치 지형을 급변시킬 폭발력을 갖고 있다. 실제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많은 정부들이 위기를 겪거나 심지어 실각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진보대연합’의 기준에는 ‘테러와의 전쟁’ 반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금, 노무현은 정치적 식물인간이고, 열우당은 붕괴했으며, 불안정한 반사이익에 기대 한나라당 안에서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열우당 원조의 블루오션”(정대화)에 뛰어들어 진보적 지지층을 흡수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반신자유주의, 반전, 주류정당 반대’를 기치로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선거대안이 필요하다.

이 선거대안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특히 민주노동당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상현 위원이 “민주노동당 중심”을 마치 진보대연합의 전제처럼 주장한 것은 부적절했다. “민주노동당 중심”은 경험을 통해 대중에게 입증돼야 할 과제이지 선험적 전제로 내세우거나 선언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대중적 입증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영향력과 지지 기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다.

동시에 진보진영은 한미FTA, 레바논 파병 등 노무현·열우당·한나라당이 합심해서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에 맞선 대중 행동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 강력한 대중 행동만이 개악을 저지하고 진정한 개혁을 쟁취할 수 있는 힘이며, 그 결과 더 좌경화한 이데올로기 지형은 진보진영과 민주노동당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조명훈

노무현 정부 평가와 진보진영의 대선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노무현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에 의해 “포위된” 근본적 한계,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초강대국 미국의 입김 등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았던 참여정부가 그나마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변명과 옹호는 지구 반대편에서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하고 “21세기의 사회주의”를 대안 사회 모델로 주창하는 차베스에 비춰보면 군색하기 그지없다.

노무현이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다가 우익에게 굴복해 개혁을 포기했다면, 차베스는 “49개 개혁 입법”을 추진하다가 우익의 군사 쿠데타로 생명까지 잃을 뻔했다.

노무현은 끊임없이 조중동 톳을 늘어놓지만, 한미FTA 같은 쟁점에서는 조중동도 노무현을 지지했다. 또, 노무현에게는 처음부터 <한겨레>나 KBS 같은 우호적 언론도 있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는 부시 1세의 친구이며 “라틴아메리카의 루퍼트 머독”이라고 불리는 미디어 재벌 구스타보 시스네로스가 소유한 베네비전 등 모든 공중파 방송과 거의 모든 신문이 끊임없이 차베스를 물어뜯었다.

한미FTA

노무현은 한미FTA 반대를 쇄국으로 몰아세우고 국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미FTA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

그러나 차베스는 한국보다 10여 년 먼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고 무역의존도도 더 높은 베네수엘라에서 신자유주의를 정면으로 거슬러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이 아니라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식 대안’(ALBA)이라는 대안 무역



어디 노무현을 차베스에 비길 건가?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노무현은 2002년 대통령 선거 즈음에 “반미면 어떡냐”고 호기를 부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자아냈지만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 방문 때는 “정치범 수용소” 운 운하며 친미 사대주의자와 마찬가지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여중생 사망 항의 운동,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 등에서 드러난 대중의 강대국 패권주의 반대 염원을 배신하고 이라크 전쟁 지원과 한미동맹 강화에 매달렸다.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뒤편 라틴아메리카에서 오랜 친미 국가였고, 경제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석유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되는 등 경제적 의존도 심각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차베스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비난하고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부시를 악마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과 빈민가 흑인들을 위해 겨울철 난방유를 싸게 공급하는 등 미국의 지배자들과 보통 민중을 구별하면서, 부시와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속시원하게 대변해 왔다.

노무현과 차베스의 이런 차이는 둘의 정치적 기반 구축의 진정성 차이와 관계 있다.

차베스는 군사 쿠데타와 자본가들의 경제적 사보타주,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 등 주요 계급투쟁을 거치며 점차 좌경화하고 대중에게 호소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반면 노무현은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까지 장악했으면서도 “삼성 공화국”, “시장 권력”을 추종하고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추진하며 사이비 개혁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맑스는 계급투쟁이 역사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의 최근 역사는 그 말이 진실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맑스는 또, 비록 스스로 선택한 조건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일지라도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현실의 인간들이라고 말했다. 그 현실의 인간들의 여망을 구현하는 리더로서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역사의 진보에 일조해 왔다. 노무현은 그 반대로 끝났음이 드러났다.

이수현

‘다함께’가 ‘사회연대전략’의 진의를 왜곡했는가?

장석준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이나 오건호 정책전문위원 등 민주노동당 내 ‘사회연대전략’ 입안자들은 이를 일관되게 반대해 온 ‘다함께’가 ‘사회연대전략’의 진의(眞意)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적극적 연대’를 ‘수세적 양보’로 매도한다는 것이다.

또,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의 김현우 위원장은 지난 당직선거 기간에 “정규직 노동자가 앞장서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제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인데, 이에 대해 대기업 노동자 양보론으로 비판하는 시각은 매우 협소할 뿐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며 ‘사회연대전략’ 반대를 밝힌 후보를 비판했다.

김현우 씨는 당 지도부가 ‘사회연대전략’을 처음 추진할 때 취한 태도처럼 관료적으로 논쟁의 범위를 제한하고는 ‘다함께’가 그

범위를 벗어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자 그건 핵심이 아니라며 회피한 것이다.

김현우 씨는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다함께’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같은 구체적인 현안에는 관심 없이 원칙만 되뇌이는 자들로 비치게 하고 싶었던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왜곡이다.

‘다함께’는 ‘사회연대전략’ 입안자들과 당 지도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자 연대’의 복원이라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할 개혁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회피

무엇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

다고 주장했고,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하는 당내 의견그룹 ‘전진’과 달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을 배신하거나 회피하는 노조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러나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몇 차례의 공개 토론회는 그 제목들에서 드러나듯 모두 “적극적 연대인가, 수세적 양보인가”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사회연대전략’이 ‘수세적’ ‘양보’ 전략이라는 것은 진의 왜곡이 아니라 이 정책의 입안자들이 스스로 토로한바다.

장석준 씨는 “한때 계속 성장하는 것으로 보였던, 노동계급이라는 이익-정서 공동체는 이제 사회과학자의 논문 안에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 역사적 조건이 사라지면서, 투쟁을 통한 연대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던 어찌면 ‘예외적’인 상황도 더 이상 지속

되기 힘들어졌다”며 “가장 낮은 수준의 연대”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연대전략’의 입안 취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예외적

또, “소득연대전략의 골자는 조직 노동자들이 조세·사회복지

기여금의 추가 부담을 먼저 결의하고 이 결의를 바탕으로 자본과 부유층이 증세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자는 것이다.”(《이론과 실천》 2006년 12월호)

그런데 장석준 씨는 “실사 입법이 제출된다고 해도 통과될 가능성은 10퍼센트 미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 토론회, 2006년 12월 28일)

이런 자기모순 때문인지 오건호 위원은 최근 발표문에서 양보

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양보’한 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 보자는 문제 제기”라고 밝히고 있다.(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 토론회, 2006년 12월 28일)

더구나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연대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점을 일찌감치 보여 주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국민연금도 ‘특혜’라며 양보를 주장하는 마당에 공무원 연금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래서인지 오건호 동지와 당 지도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다함께’가 ‘사회연대전략’의 진의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전략’의 입안자들이 노동자 연대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취지가 옳바르다고 해서 그 취지의 실현 방안도 옳바르다는 법은 없다. ‘사회연대전략’은 그런 잘못된 대안이기에 완전 폐기돼야 한다.

장호중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의 흐름을 끊어내자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간첩’ 색출을 넘어 단순한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데까지 이르렀다. 지난 1월 두 전교조 교사가 ‘선군정치’ 찬양 혐의로 구속됐고, 얼마 전 또 한 명의 교사가 보안경찰의 출두요구를 받았다. 강정구 교수 재판에서 법원이 강 교수를 법정구속하려 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또한, 보안경찰은 2월 24일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에 참가한 후 귀가하던 민주노동당 서울시 학생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폭력 연행했다.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는 노무현 정부의 구역질나는 위선이 다시 한 번 폭로되고 있다. 그런데 공안기구들이 다시 탄압을 강화할 수 있게 된 데는 좌파의 잘못된 대응이 한몫하고 있다.

‘일심회’ 사건은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민주노동당 안의 PD 경향들은 거의 모두 ‘일심회’ 사건에 침묵했다. 오히려 ‘자율과 연대’나 일부 ‘전진’ 활동가들은 마녀사냥의 피해자들에게 돌을 던지기까지 했다. 심지어 분파주의에 눈이 멀어 이 기회에 탄압받는 동지들을 내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 중 하나는 민주노동당이 ‘친북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북한 지배계급에게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에 우호적인 좌파를 비난하면서도 남한 지배자들의 억압에 침묵하고 이를 방조함으로써 사실상 남한 체제에 충성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

‘자율과 연대’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그들은 남한 체제가 북한보다 질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한은 똑같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 바탕을 둔 자본주의 체제다. 비록 남한의 정치체제가 북한보다는 자유주의적이지만, 이조차 남한 노동자와 학생의 처절한 투쟁으로 권력자들에게 강제해 낸 것일 뿐이다.

사실, PD들은 자유주의 정부 등장 이래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철폐 같은 민주주의 과제가 더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서구에서조차 민주주의 문제는 운동의 주요 쟁점이 되곤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이 자본가 계급(부르주아지)의 지배이기 때문이다. 1999년 시애틀 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미국 정부와 2001년 제노바 G8 반대 시위대에 발포해 카를로 줄리아니를 쏜 죽인 이탈리아 정부의 사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보여 줬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공세와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자유민주주의 정부는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억압 조처들(테러방지법, 국토안전법 등)을 도입했다.

하물며 남한처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고, 권위주의적 유산과 반동 세력의 준동이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 과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심지어 대다수 당내 PD들은 ‘국가 주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는 당연하다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는 있지만 그것을 실천해서는 안 된다’는 공안검찰의 논리에 부화뇌동하기까지 했다.

언제부터 ‘악법도 법이다’가 우리 운동의 미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독일 법학자 라트브루흐조차 “악법에 복종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했다. 결국 당내 PD들의 기회주의는 지배자들의 ‘이간질시켜 각개격파하기’ 책략을 도와주는 꼴이 됐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주요 표적들인 주사NL 분파들도 마녀사냥 반대 투쟁에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았다.

NL 조직들은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애써 반통일·냉전 악법으로만 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2·13 합의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종전선언·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수구·냉전 세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낙관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90퍼센트

이상이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한 7조 위반자들이다. 반면 ‘간첩죄’와 ‘회합·통신’ 등 “남북 교류” 관련 위반자들은 3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또,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는 지 몇 달도 안 된 11월에 ‘국제사회주의자들’ 5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 전보다 줄긴 했지만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6·15 공동선언 이후에도 해마다 평균 1백20여 명이 넘었다.

대중파업

남북관계가 좋아져도 국가보안법이 약화할 가능성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유신 독재 강화에 이용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약화·폐지에 더 결정적인 것은 구체적인 계급 세력 관계다. 국가보안법이 냉전 악법이기도 하지만 내부의 저항을 억압하는 체제 수호 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핵 위기와 김일성 조문 파문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됐던 1994년에 김영삼은 4백67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검거했다. 반면, 1996~97년 사이에는 무려 1천4백11명이 검거됐는데, 당시 탄압의 맥락은 남북 관계 문제라기보다는 경제 위기 조짐이 보이면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분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가 줄기 시작한 데는 사실, 김영삼 정부를 붕괴시킨 1997년 노동법·안

기부법 날치기 통과 항의 대중파업이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중파업으로 민주노총이 실질적 합법화를 쟁취했고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노동자 대중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건설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대중적 노동자 조직의 합법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국가보안법 적용면에서 지배자들은 PD계열의 단체들을 관용하고 ‘주사파’나 혁명적 좌파 탄압은 지속하는 ‘이간질시켜 각개격파하기’ 전략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냉전 악법이라고만 보고, 그 폐지가 남북관계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은 실천에서 개량주의로 흐를 수 있다. 남북 지배자들의 협상에 기대거나 북한에 좀더 유화적인 입장을 가진 자유주의 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속죄양

이런 태도로는 자유주의 정부 하에서 벌어진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궁지에 몰린 “공안기관의 고용안정 투쟁”으로만 규정하기가 쉬운데, 이는 오해다. 자유주의 정부들의 보안법 적용은 단지 우익의 압력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억누르는 데 우파와 근본적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다.

김영삼은 야당 시절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가 “집권해 보니 국보법이 필요하더라”고 했다. 김대중 정부의 법무장관 박상천은 “경제 위기 때문에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한편, NL 진영이 대부분 ‘일심회’ 사건 등에서 동료들을 적극 방어하지 않은 데는 북한 정부의 처치를 난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고려된 듯하다. 그러나 북한 지배자들의 이익과 남한 민중의 이익은 같지 않다.

노무현 정부가 ‘일심회’ 사건을 터뜨리는 이유는 북한 핵실험에 진노한 우익을 달래고, 열우당 붕괴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속죄양을 삼기 위해서다. 특히 운동 세력을 친북 세력으로 몰고 그림으로써 내부를 이간시키는 효과를 지배자들은 노린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희생자를 방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려는 운동은 매우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요구로 광범한 세력을 끌어들이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정구 교수 대책위의 일부 주장처럼 강 교수의 사상에 동의해야만 그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입장 차이를 떠나 사상과 양심·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친민주주의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 국가보안법과 마녀사냥에 맞선 투쟁에 나서야 한다.

한규환

이탈리아

재건공산당 지도부의 착각

아프가니스탄 주둔 이탈리아 군대

지난 2월 21일 이탈리아 중도좌파 연립정부의 총리 로마노 프로디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런 정치적 혼란은 최근 비첸차의 미군기지 확장 반대 대중 시위에서 드러난 대중적 반전 정서의 압력 때문이었다. 이 시위에는 재건공산당 당원들도 대거 참가했다.

그러나 재건공산당 지도부는 이런 정서를 애써 외면했다. 이번 표결에서도 재건공산당(리폰다찌오네 꼬무니스타) 의원들은 1명을 빼고 모두 파병 연장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들은 연립정부를 깨지 않는 것이 베

를루스코니와 우파의 복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믿기 때문에, 제국주의 전쟁에 동참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프로디에 일관되게 반대할 수 없었다.

약점

재건공산당의 이런 약점을 잘 아는 프로디는 총리직을 사퇴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프로디는 신자유주의적인 2007년 예산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고는 예산안 통과를 자신의 신임과 연계해, 재건공산당과 연립정부 내 다른 좌파들을 단속했던 경험을 반복하려 한다.

프로디는 자신이 다시 총리로 복귀하는 대신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 찬성을 포함한 12개 조항에 합의하라고 종용했다. ‘베를루스코니가 돌아오는 게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고 으박지른 것이다.

중도좌파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베를루스코니와 우익의 복귀를 막고 프로디 정부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극좌파들이 프로디의 “개량주의적 정치 계획”을 군말 없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베를루스코니의 복귀설로 혼란에 빠진 재건공산당 지도부는 이런 협박에 다시 한 번 굴복할 듯하다. 그들은 반대표를 던진 상원의원 2명을 연립정부 내 우파와

주요 언론들이 마녀사냥하는 것을 방관했다.

심지어 재건공산당의 프란코 조르다노 총재는 “우리에게는 오로지 프로디만이 있다” 하고 말했다. 지금 재건공산당 지도부는 곧 있을 프로디 복귀 재신임 투표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을 단속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이것은 베를루스코니와 우익의 복귀를 효과적으로 막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탈리아 대중 투쟁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다.

대중 행동

프로디 정부의 목표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유지해 이탈리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위신을 유지하는 것 외에 이른바 ‘유럽 경제의 병자’인 이탈리아 경제를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급속히 구조조정해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실제로, 연금혜택 축소 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12개 조항에 합의하는 것은 재건공산당 지도부 다수가 이런 공격에 맞선 저항을 조직하지는 않고 수수방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타협으로 우익의 복귀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재건공산당 지도부의 착각과 달리, 프로디는 우파 야당의 일부인 기독교민주연합을 연립정부로 끌어들이려 한다. 이는 주류 정치의 우경화를 더한층 촉진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재건공산당 지도부의 타협에 반대하는 재건공산당 평당원들의 분노를 대중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건공산당 내 혁명적 좌파의 몫이다.

김용욱

박노자의 반감

사회민주주의의 실체를 보여 준
노르웨이 사회주의좌파당

최근의 며칠은 노르웨이 좌파 정치 역사상 꽤나 수치스러운 나날이었다. 지지난해 비교적 급진적인 사민주의 정당인 사회주의좌파당(SV)과 사민주의의 정통 정당인 노동당(AP)이 진보 연립 내각을 조각했을 때, 노동당보다 왼쪽에 서 있다고 늘 자부해 온 사회주의좌파당의 입각 조건은 다름이 아닌 “노르웨이 특수 부대들의 남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이었다.

노르웨이 군대가 카불에서 “평화유지군” 명분으로 주둔하는 것은 유엔 결의안에 따른 것이니 참아야 하지만, 유엔과 무관하게 미국과 나토가 남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는 대탈레반 전쟁에는 노르웨이가 절대 끼여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때 사회주의좌파당의 논리였다.

그 때 사회주의좌파당의 입각이 계기가 돼 남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사지에서 노르웨이 군대를 뺄 수 있었으니 쾌재를 불렀던 좌파들이 많았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토에 매우 친화적

인 노동당과 연합을 해서 조각을 했다는 것도, 카불에서의 노르웨이 주둔군을 가만히 놔둔 것도 사회주의좌파당으로서는 상당한 타협이었는데, 결국 지금 이 타협의 재앙적인 결과를 목도할 수 있게 됐다.

며칠 전 나토가 다시 한 번 노르웨이 특수부대 1백50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명분은 “카불 주둔군 강화”였지만, 그 임무가 카불에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독립 투쟁을 진압하는 것이라는 점도, 노르웨이 군인들이 카불로 들어오는 만큼 미군들이 카불에서 남부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가 적극적으로 독립군 진압에 나설 수 있다는 것도 뻔한 일이다.

노동당이야 “노르웨이 안정의 최종적인 보장자 미국”의 요청이고 특수부대란 자원 입대해 고액의 월급을 받는 전문가이고 하니 나토, 즉 미국의 요청에 그냥 넘어가는 데에서는 별로 주저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1970년대에 노동당의 친미 정책과 노르웨이의 나토 가입을 비판하며 노동

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회주의좌파당은[어떤가]? 원칙상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하기에 당원, 특히 젊은 당원들의 다수가 며칠간 격렬한 반전 시위를 하고 군대를 보내지 말라고 외쳤다.

그런데 지금 재정부 장관을 하고 있는 크리스틴 할보르센(Kristin Halvorsen) 당수를 비롯한 사회주의좌파당계 각료와 당의 “지도층”은 일단 원칙보다 정부 내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들은 소수였기에 각료회의에서 반대를 해도 여차피 파견 결의안이 통과됐겠지만, 반대마저도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지금 기고만장하는 할보르센 당수가 “우리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이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해대면서, 아예 당내에서 이번 아프가니스탄 관련 결의를 비판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사회주의좌파당의 전국 운영위원회(당 최고위원회인 셈) 중 내각 탈퇴와 당수 사퇴를 요구한 사람이 한 명

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평화주의자”들에게는, 노르웨이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 독립투사들을 마구 죽여야 할 것이라는 무서운 사실보다는 정부 안에서 재정부·교육부·환경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

그들이 처음에 특히 젊은이들을 당으로 유치할 때 “평화주의”를 호소력 높은 명분으로 잘 이용했지만, “큰 형 노동당”과 함께 자본주의 국가를 같이 운영할 만한 입장이 된 오늘날에는 이상주의든 평화주의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젊은 당원들이야 격렬히 시위하고 있지만 뭘 소용이 있어야지.

민중노동당 안에서 “사민주의”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르웨이 정부 “제2인자”의 권력에 안주해버린 “사회주의자” 할보르센의 얼굴을 한 번 보기 바란다.

이러한 부분들이 자본주의 국가를 “안으로부터 개량하겠다”는 사회주의자에게 필수적으로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란다.

물론 나는 그렇다고 사회주의좌파당의 모든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다. 예컨대 유지원 비용 관련 등을 “제대로” 개량한 부분도 많다. 솔직히 나만 해도 지자체 선거에서 사회주의좌파당을 찍고 지금도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좌파당에게 모자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역시 뻔한 일이다.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맑스주의와 종교

맑스가 맑스주의자로서, 즉 노동자 혁명의 옹호자로서 가장 먼저 쓴 글은 종교에 대한 논의로 시작한다. 더욱이, 그 글(1843년에 쓴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는 맑스의 말 중 십중팔구 가장 유명한 말, 즉 “종교는 사람들의 아편”이라는 한마디 문구가 들어 있다.

그럼에도 맑스의 진정한 종교관은 대체로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오해를 받아왔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듯한 경우도 있었다.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듯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60년대의 유럽이 그랬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이란 혁명의 영향과 특히 9·11과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슬람이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자 사정이 바뀌었다. 세계의 정치 상황이 하도 많이 변해서, 좌파들과 자칭 맑스주의자들 — 그리고 맑스의 종교 분석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 조차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기 십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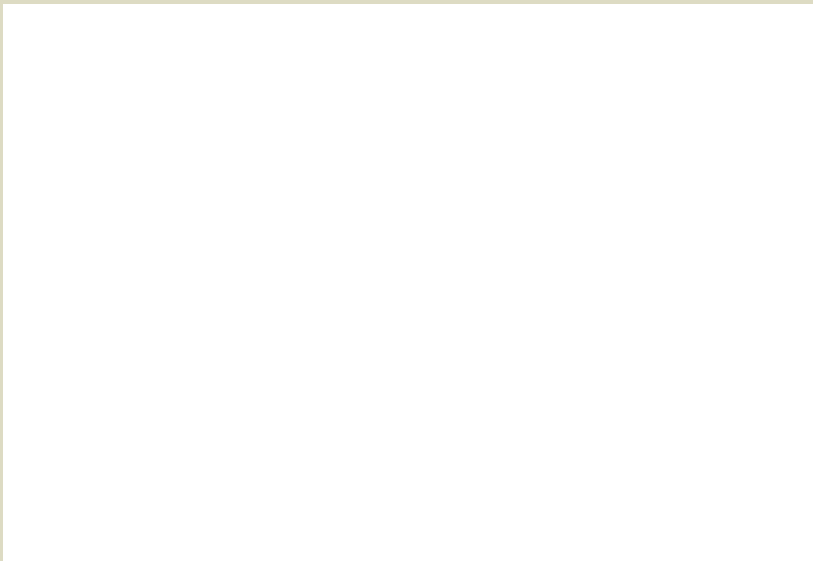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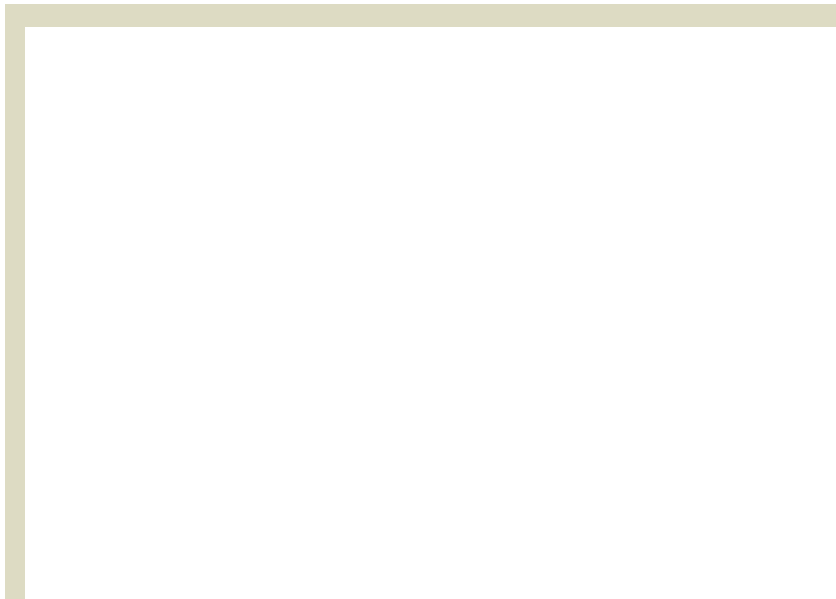
가장 흔한 오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스탈린 집권 이래 소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맑스와 맑스주의자들은 종교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종교를 금지하거나 탄압하려 한다는 것이다. 둘째, 맑스주의는 모든 종교 사상을 그저 어리석고 고루한, 그래서 경멸받아 마땅한 사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셋째, 맑스주의자들은 모든 종교와 종교 사상이 항상 반동 세력과 지배계급의 동맹이나 도구라고 본다는 것이다.

소외

물론 맑스가 종교적 세계관을 거부한 무신론자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은 내가 이 연재 칼럼에서 이미 설명한 맑스의 유물론 철학과 역사이론의 요체였다. 맑스는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고 생각했고, 관념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관념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이 점은 종교도 마찬가지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종교가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런 유물론적 태도 덕분에 오히려 맑스는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세련되고 어떤 의미에서 체계적인 종교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다면, 그것은 종교가 인간의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충족시키는 듯하기 때문이다. 계급이 출현하기 전의 수렵·채집 사회에서 종교가 처음으로 발전했을 때, 인간은 동물이거나 자연력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그것에 철저히 의존하며 살았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동물이나 자연력을 잘 알았지만 결코 과학적으로 이해하지는 못



(위) 부시를 지지하는 무슬림(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아래) 부시의 전쟁에 반대하는 무슬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종교는 범신론적인 정령(精靈) 숭배라는 형태를 띠었다. 강·바람·산·해와 달·늑대·곰·원숭이·코끼리 등이 신령한 존재로 여겨졌다. 다시 말해, 합리적 설명이 전혀 불가능하던 때 종교는 사람들의 의존 심리를 정서적으로 표현하고 인생의 영고 성쇠를 ‘해명’해 주었다.

5천여 년 전 계급이 분화하고 여성이 천대받기 시작하고 국가가 사회를 지배하게 됐을 때, 자연에 대한 의존은 여전히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 불평등·착취·노예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힘에 대한 의존과 그 힘의 지배, 즉 소외도 나타났다.

종교는 이런 사정을 반영했다. 신은 이제 더는 자연의 혼령이 아니라 제우스·야훼·알라처럼 강력한 권위를 가진 남성이 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종교는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내세에서는 재산이 아니라 선행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하며 위안을 주기 시작했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종교는 … 아직 자기 완성을 이루지 못했거나 이미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의

자기 의식이고 자기 인식이다. … 이 국가, 이 사회가 종교의 뒤집힌 세계관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이 국가와 사회 자체가 뒤집힌 세계이기 때문이다. 종교는 이 세계에 대한 일반 이론이고, 백과사전적 개요이고, 대중적 형태의 논리이고, 정신적 체면이고, 열정이고, 도덕적 제재이고, 엄숙한 보완이고, 위안과 정당화의 보편적 토대이다.”

따라서 종교의 형태와 규모와 기능은 다양하고, 그것은 항상 구체적 사회 조건에 달려 있다. 종교는 지배계급 자체에게 그들의 지위를 정당화한다.(심지어 왕과 독재자들, 기업주와 군장성들도 자기 정당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 질서는 신의 뜻이라고 설교하고 대중에게 세속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역설하며(“가이사[로마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수동성을 부추기는 등 대중에게도 지배계급을 정당화한다. 그런가 하면, 천대받는 자들의 고통과 더 나은 세계를 바라는 그들의 희망을 표현하고 심지어 공공연히 반란을 옹호하기도 한다. 그래서 맑스는 종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종교는] … 현실의 고통을 표현할 뿐 아니라 현실의 고통에 항의하기도 한다. 종교는 천대받는 피조물의 한숨이고,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고, 영혼 없는 세계의 영혼이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주요 종교들(그리스도교·이슬람교·힌두교 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런 종교들이 겉보기에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시기와 다양한 장소에서 이 다양한 구실을 모두 할 수 있을 만큼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래서 17세기 유럽에는 봉건 세력의 반(反)혁명적 그리스도교(가톨릭)와 부르주아지의 혁명적 그리스도교(칼뱅주의)가 공존했다. 1960년대 미국에는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그리스도교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흑인들의 그리스도교가 공존했다. 라틴아메리카에는 독재자들과 미국 제국주의의 가톨릭과 빈민들의 가톨릭이 공존하고, 중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친제국주의 이슬람교와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반제국주의 이슬람교가 공존한다.

이슬람교

이런 분석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치적 결론들은 흔히 맑스의 것으로 알려진 상투적 주장들과 모순된다. 첫째, 맑스주의자들은 (혁명 전이든 혁명 후든) 종교를 금지하려는 노력 일체를 철저히 반대한다. 오히려 맑스주의자들은 종교 신앙과 예배의 자유 원칙을 옹호한다. 종교를 “폐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종교를 낳는 소외와 착취 상황을 폐지하는 것뿐이다.

둘째, 사회주의 혁명은 노동자 대중 자신의 행동이기 때문에 종교 신앙을 가진 노동자들도 혁명을 일으키고 혁명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꼭 필요할 것이다.

셋째, 맑스주의자들은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본래 더 반동적(이거나 더 진보적)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분명히, 지금 이 말은 주로 이슬람교에 적용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힌두교나 유교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종교적 색채를 띠거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끄는 정치 운동들 — (가톨릭인) 우고 차베스나 (불교도인) 티베트 민족주의나 중국의 파룬궁이나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저항세력 — 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 운동의 종교 신앙을 판단 근거로 삼지 않는다. 그 운동이 대변하는 객관적 사회 세력과 그 정치적 대의의 정당성이 우리의 판단 근거이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량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인종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동자와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 여성 정책 평가 토론회

‘참여정부 4년,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지난 2월 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주최로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총론 발제를 맡은 남윤인순 여연 상임대표는 2006년 한국의 여성 권한 척도 순위가 75개국 중 5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들의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참여와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부진하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물론 이것은 정당한 요구다. 하지만 최초의 여성 총리 한명숙과 면담을 하러 찾아가던 KTX 여승무원들이 전원 연행된 사례는 그 한계도 보여 준다.

남윤인순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한계로 여성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를 우선 꼽은 것도 옳바랐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의 70퍼센트를 비정규직으로 만든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악행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웠다. 최근 통과된 비정규직 개악안을 비판하지 않은 것도 그렇다.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는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2년마다 반복되는 계약 해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올바르게 지적했다. 그러나 모순이게도, “의의”가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정부의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진일보”로 평가한 것도 정부·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해고 칼바람이 몰아치는 현실을 외면한 입장이 아닐 수 없다.

토론자로 나온 노동부 여성고용팀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를 분명하게 비판한 발제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아쉬웠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국무총리 한명숙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 중에 강제 연행되는 KTX 여승무원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5.2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보육예산은 증가했지만 기존 예산이 워낙 적었고, 시설 지원은 줄어들어 보육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준비하느라 보육교사들은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체불당한 채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지만 인증을 통과해도 겨우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점에서 남윤인순 대표가 “보육교사의 처우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노무현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 기초 마련”을 했다고 총평한 것은 부정확했다. 남윤인순 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보육료 상한선 폐지는 “보육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다.

남윤인순 대표 등이 또 다른 “성과”로 평가한 성매매방지법은 ‘자발적 성

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한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 지원 대책’도 생색내기엔 그친다.

더구나 성매매 여성 다수가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 판매를 택하는 상황에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부가 “성매매 피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추켜세우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이번 토론회의 부제는 ‘참여정부 4년,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였다. 여성 운동의 오랜 요구 끝에 호주제 폐지 등의 개혁을 노무현 정부 하에서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4년 간 신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추진하며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보육 공공성을 훼손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을 빈곤과 절망으로 내몰았다. 발제자들은 노무현 정부 여성정책의 많은 한계를 지적했지만, 핵심적 반여성 정책에 대한 더 날카로운 비판이 필요했다.

송주

Forums

부산대
‘보호소’에서 불탄 ‘코리안드림’
— 이주노동자의 현실
3월 13일(화) 저녁 6시 30분
문의: 010-4569-0501

서울 중부
21세기 사회주의
— 민주적 참여계획경제는 가능한가?
3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연사: 정성진(맑스주의 경제학자,
《마르크스와 트로츠키》 저자)
장소: 명동 향린교회 1층 향우실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맞불〉 증면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에 동참합시다

02) 2271-2395으로 메시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2-04-078931

기업은행 066-042771-01-012

농협 100037-56-119794

신한은행 308-12-498840

우리은행 1002-130-549338

우체국 011726-02-129945

하나은행 197-910005-87207

〈맞불〉 웹사이트 www.counterfire.or.kr에서

핸드폰 결제와 CMS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MS 모금은 매월 25일에 인출됩니다.



-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증면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악법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활동가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 25일 대의원 대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특별법 강요에 맞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법외노조로 남아 싸울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다수의 대의원들이 “정부의 탄압이 두려워 백기 투항하느니 조합원들을 믿고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또다시 ‘악법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안(이하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것은 수차례 민주적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항을 무시한 채 탄압에 맞서 투쟁할 시기에 또다시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원칙하고 부당한 시도였다.

악법 수용 주장자들은 지난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어기고 악법에 투항해 법대로 들어간 일부 지부의 대의원들까지 동원해서 대의원대회에 참석시켰다. 대의원 자격이 있는지도 불분명한데 말이다.

조직 보존

수정안 찬반 토론에서 악법 수용을 주장한 한 대의원은 “법외노조를 고수하면 조합원 이탈이 늘어난다. 조직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마포지부 대의원은 “조직 보존은 정부와 맞선 투쟁

을 통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악법을 수용한 지부들이 많은 경남(56퍼센트 감소), 서울(37퍼센트 감소), 전남(42퍼센트 감소)에서 조합원 이탈이 두드러졌다. 반면, 대경본부와 전북본부 소속 몇몇 지부는 탄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한 결과 조합원 숫자가 오히려 늘었다.

논리가 너무나 군색해서인지 악법 수용 찬성 주장자는 겨우 4명 정도에 불과했고, 반대 주장은 10명을 훌쩍 넘기기도 의장이 정회를 선언할 때까지 계속됐다.

정회 시간에 악법 수용 반대자들은 찬성자들에게 다가가 왜 정정당당하게 공개 토

론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이 때 ‘6급 이상은 조합원에서 제외하더라도 법대로 들어간다’는 내용의 악법 수용 찬성 측 문건이 폭로됐다. 이에 악법 수용 반대파들은 분노해서 단상으로 올라가 항의하고 구호를 외쳤다.

당황한 지도부가 유회를 선언하면서 대의원대회는 무산됐다. 이날 공무원노조 권승복 지도부는 아쉽게도 분명하게 악법 수용 거부의 입장을 취하기보다 양쪽을 중재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곧바로 “합법화 요구 외면한 전공노 지도부”(〈서울신문〉사설)라는 주류 언론의 공격이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악법 수용 거부 활동가들을 비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악법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난해 내내 노조 사무실 폐쇄, 파면, 해임 등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다.

지금은 악법 수용을 강요하는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과 총액인건비제 등의 공격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때다. 그것이 진정한 단결을 이루고 공무원노조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다.

이재열(공무원노조 활동가)

포항건설노조 파업 파고

포스코의 조폭 노릇을 한 검찰

지난 2월 21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작성한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폭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지난해 7월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파괴하려고 별별 짓을 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말처럼 “파업 파괴를 위해 검찰이 감행한 월권행위를 보고 있자면, 이들이 검찰인지 조폭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검찰은 경찰 폭력으로 죽은 하중근 열사 문제에 개입해, 부검 장소를 조합원들이 모이기 힘든 대구 쪽으로 옮기려 했다. 하중근 열사의 유족을 설득해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러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으려고 하기도 했다.

“임단협 합의안 찬반투표에 영향이 있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노동부에 요구하고, 노조원 자격 규정, 파업 관련 투·개표 등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과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사측인 포스코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주장도 했다.

파업 노동자들을 최대한 많이 구속하려고 “범죄 사실보다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을 묻”는 야비한 짓도 했다. 감히 삼성이 건회는 소환조차 못하는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파업 노동자 70명을 한꺼번에 전원 구속하는 “경이적인 사건”을 만든 것이다.

“경이적인 사건”

게다가 검찰은 파업을 지원하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김숙향 포항시의원을 사찰하고 형사처벌하려 했지만, “자료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또, 보고서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검찰이 포스코 본사 건물에 공권력 투입을 확정”했다고 밝혀, “유연한 진보”를 요구하고 ‘개혁 정권’을 자칭하는 청와대가 사실상 사건을 진두지휘했음도 드러났다.

이런 파업 파괴 행위에 대해 검찰은 “통상적인 활동”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노무현은 참여정부 들어서 “권력이 합리화되고 정경유착이 끊어졌”다고 말하지만, 검찰·경찰의 “통상적인 활동”이 이렇게 기업주를 편향인 것은 이 국가관료들이 기업주들과 “천 갈래 만 갈래의 끈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 정부’ 시대에도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 따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가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다행히 이번 폭로를 계기로 건설노조의 투쟁이 되살아나고 있다. 2월 22일 열린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는 8백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해 이번 사건 책임자 처벌과 구속자 석방, 건설업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아직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이석형 지도부는 이런 당면 투쟁 과제들을 뒤로 미룬 채 “현장 대장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 건설에 나서야 한다.

강동훈

전교조

탄압과 개악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지난 2월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 회원 5백여 명이 모여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한나라당은 부패가 가득한 사립학교 재단을 비호하며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기 위해 애써 왔고, 노무현은 2월에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나라당 강재섭과 합의했다. 노무현·열우당은 거의 유일하게 한 보잘 것 없는 개혁마저 한나라당·사학재단의 압력에 굴복해 되돌리려 한다.

사학 재단 이사 중 전교조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음에도, 일부 재단은 ‘사립학교법 때문에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한다’는 등, ‘사립학교법 때문에 건학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등 악선전을 하고 있다. 이사회 회의록이나 예결산 공개조차 거부하는 자들이 학교 운영과 건학 이념 운운하는 것은 역겹기 그지 없다.

위선적인

똑같은 ‘근무지 이탈’인데 한나라당·우익 주도의 사학법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문제 삼지 않고, 연가 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만 징계하려는 교육부도 위선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사학국본은 이후 지속적인 항의를 조직하려고 국회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했다.

이어서 전교조 교사들은 ‘교원평가 법제화 저지 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교원평가 시범 실시 결과 교원들의 잡무만 늘어날 뿐 학생 인권 보장, 학부모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질 향상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교육부는 2월중 국회에서 법제화하고 2008년부터 전면 실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시범학교를 5백여 개로 확대하려고 민주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대상 학교를 선정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새로 개설된 학교를 일방적으로 시범학교로 지정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시범학교 선정 회의를 대체하거나, 교장·교감 앞에서 공개 투표를 진행하는 등 반교육적 방식이 자행되고 있다.

연가투쟁 참가자 징계, 국가보안법으로 교사 구속, 사립학교법 개악 시도, 교원평가 법제화 시도 등 지금 정부와 우익들은 전교조를 전면 공격하고 있다. 신임 전교조 위원장은 2월 14일 교육부총리와의 만남 이후 협상을 통한 성과를 기대하는 듯도 하나, 지금은 협상보다 단호한 투쟁을 계속 확대해야 할 때다.

김성보(전교조 교사)

>> 독자편지

이주노동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잔업과 특근을 제외하고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얼마 전에는 아파서 병원을 가려 해도 못

가는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병원에서는 3주 동안 치료하며 쉬라고 권유했지만, 그 다음날에도 그는 다시 일을 해야 했다. 이것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현석

‘위기의 진보진영, 대반전 가능한가’ 토론회

2월 21일 ‘민주노동당집권전략위원

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상현 집권전략위원이 발제자로 나와 우려스러운 주장을 했다. 당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나라를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분배뿐 아니라 성장에 대한 전략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기사가 실렸으면 좋겠다.

구태욱

금속노조 선거

이번 선거에서 가장 좌파적 입장을 낸 이정행 선본이 선전을 한 것이 고무적이었다. 조합원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지만 ‘전진’보다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진’ 후보가 선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마도 ‘사회연대전략’ 때문인 듯하다.

박경석

여수 외국인 '보호소' 참사

이주노동자 살인 정부에 맞선 저항의 확대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2주째 되는 날 서울역에 8백여 명이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 집회는 60여 개 단체들이 참가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최했다.

집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점을 보여 줬고, 집회 연사들은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이 집회를 알리기 위해 홍보물 5만 장을 제작해 수도권 곳곳에 배포했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10여 개 지역위들은 거리 홍보전을 진행했다. 이주노동자와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공동체들도 이날의 집회를 위해 적극 조직했다. 민주노동당 기아차 화성분회 노동자들은 자체 홍보물을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배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감시단을 조직해 집회와 행진 때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쳤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이 집회는 최근 이주노동자 집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릴 수 있었다.

경찰은 진압 부대를 동원해 거리 행진을 막으려 했지만, 인권감시단과 한국인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 대열을 둘러싸고 끝까지 행진했다.

'공대위'에는 진보적 종교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속속 가입하고 있다. 서울과 여수뿐 아니라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 청주 등지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기구가 건설되는 등 항의 운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공대위는 이 운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대대적인 서명·모금·홍보 활동을 호소하고 있고, 여러 지역의 공동 기구들과 네트워크도 형성했다.

무대책

물론,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화재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28명을 제대로 된 건강 검진도 없이 청주보호소에 다시 구금했고, 2월 23일에는 이들 중 17명을 강제 추방했다!

이 일은 공대위가 이들에 대해 '일시 보호 해제' 신청을 한 바로 다음 날 일어났다. 청주보호소에 있는 한 생존자는 "링거병을 앓고 치료받던 사람을 병원에 데려간 다며 이 곳으로 데려왔다"고 했다.

또, 몇몇 생존자들은 "지금도 새벽 4시만 되면 불이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너무 무섭다"고 했다. 2월 26일에는 사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부상자 중

황해파 씨가 끝내 숨졌다.

우리는 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항의 운동을 지속하고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 운동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억압에 반대하는 광범한 단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두 보여 주고 있다.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역의 공동전선에는 NGO, 종교단체들부터 민주노동당 소속 노조들, 급진 좌파들까지 다양한 세력들이 참가하고 있고 매우 진지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애초 예정됐던 유가족의 집회 참가가 무산된 것은 아쉽다. 유가족들은 한국 정부의 무대책에 분노하며 모두 상경할 의지를 보였지만, 중국 대사관까지 동원한 한국 정부의 엄청난 회유와 압력에 밀려 돌연 상경을 취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 공대위 공동대표인 이철승 목사가 "국무총리를 만나러 유가족들이 상경할 것이 아니라 여수로 불러 내려야 한다"며 유가족들의 서울 상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유감이다. 정부에 항의하는 운동을 먼저 수도에서 크게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이런 몇 가지 아쉬운 점들 때문에 여수 참사 항의를 위한 공동행동이 약화돼선 안 된다. 지금은 항의 운동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때다.

이정원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파병?

〈맛불〉 제작이 마무리될 즈음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아프가니스탄 전투병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M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이 요청을 한 듯하다.

국방부는 즉각 이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상습적 거짓말 전력을 볼 때 이런 부인을 끝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 국무부 아태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은 노무현이 부시에게 "한국군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할 것이고,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에도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했었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연장했고, 레바논 파병을 결정·추진하고 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겨울이 끝나가면서 점령군(타도군)과 저항세력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저항세력 측은 눈이 녹으면 수도 카불을 향해 진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남부 지역은 사실상 저항세력의 수중에 떨어진 지 오래고 카불 북부에서도 저항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영국군이 이라크에서 병력을 빼 아프가니스탄에 배치할 만큼 상황이 다급하다. 나토군 사망자수도 치솟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 전투 병력이 파병된다면 당연히 자이툰 부대처럼 한가하게 떡이나 돌리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이탈하기는커녕 노무현 정부는 부시와 함께 더 깊이 가라앉으려 한다. 반전 운동은 자이툰 부대 철군을 요구해야 할 뿐 아니라 레바논 파병과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파병 추진에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김용민

3월 개강 맞이
강연회

교과서와 다른 현실은 대학생들을 한숨짓게 하고 때론 절망 한가운데로 내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입시 준비로, 취업 준비로 잠시 잊고 지냈던 세상 일들을 신입생 여러분과, 또 그보다 앞서 대학 생활을 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진보적 관점으로 세계를 들여다보고 싶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진보적 대학생이 알아야 할
9가지 주제

주최 : 대학생 '다함께'
장소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우강당
참가비 : 하루 5천 원, 이틀 8천 원
참가문의 : algsstudent@hanmail.net
02-2271-2395 | http://stu.altogether.or.kr

토론 주제

노동의 비정규화 | 입시 교육 비판 | 지구온난화 | 국제여성의 날 기념 행사 | 한미FTA | 이라크 침략 4년 | 이주노동자의 현실 | 신자유주의와 대학 | 미국의 저항 운동

연사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1, 2》의 저자. 현재 〈한겨레〉 칼럼니스트.

김민웅 성공회대 국제 NGO 대학원 교수. 〈프레시안〉 편집위원. EBS 〈토론카페〉를 진행한 바 있다.

버지니아 로디노 지난 1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50만 명 반전 시위를 이끌었던 미국 '평화정의연합'의 국제연대위원.

이필렬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 전환' 대표.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의 저자.

강수돌 고려대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충남 신안리 이장으로 생태 환경 훼손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비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조희주 전교조 전 부위원장. 교육시장화와 입시경쟁 교육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아노아르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초대 위원장. 1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호소'에 불법적으로 수감됐다.

토르나 림부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박노자



김민웅



버지니아 로디노



이필렬



강수돌



우석균



조희주



아노아르



토르나 림부